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2020. 12. 16.(수) 15:00~17:30



온라인 생중계

성평등정책 과제도출·주체별 역할 논의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일시: 2020.12.16.(수) 15:00~17:30

장소: 온라인 생중계(ZOOM)

공동주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 목적

-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 도출
-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논의
- 전북성평등문화 확산네트워크 활동 방향 공유

■ 개요

- 날짜: 2020.12.16.(수) 오후3시~5시30분
- 장소: 온라인 생중계(ZOOM)
- 공동주관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전북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 내용

시간	내용	진행자
15:00~15:20	참석자 전원 자기소개	사회: 구혜경 (전북문화관광재단)
	포럼 취지 소개	개회: 이수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발제 및 토론	좌장: 진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15:20~15:50	발제1.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정책추진과정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발제2.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15:50~16:00	쉬는 시간	
16:00~16:50	토론1. 문화재단 역할	홍교훈(완주문화재단)
	토론2. 문화예술인 역할	정하영(시각예술인)
	토론3-4. 의회 역할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조동용(전라북도의회 의원)
	토론5. 인권분야 역할	황지영(전주시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토론6.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역할	도인정(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16:50~17: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20~17:30	정리	

목 차

발제1.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정책추진과정	9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발제2.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	17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배우다컴퍼니/한국문화예술위원회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토론1. 전북권 문화재단 성평등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	31
홍교훈(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토론2. 그래.. 역시 난 비주류였어!	35
정하영(미술가)	
토론3. 전라북도 성 평등 정책을 위한 전라북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	39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토론4. 의회 역할 토론문	41
조동용(전라북도의회 의원)	
토론5. 인권분야 역할	43
황지영(전주시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토론6. 문화예술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47
도인정(전라북도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발제]

1.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정책추진과정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2.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배우다컴퍼니/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정책추진과정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 배경

2016년 00계_내_성폭력 문화예술계 고발운동

2018년 전세계적인 미투운동확산으로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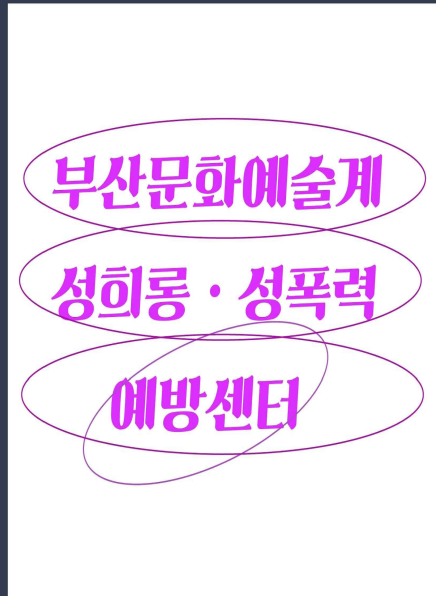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대응 TF 구성

- TF팀구성 요청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여성단체- 예술인단체
-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지자체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구축필요



- 지역문화재단
- 예술인단체
- 여성단체, 전문가 그룹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예술지원정책

△사회적가치 확산

△미래문화환경 준비

△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성평등분과 성평등위원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추진현황

1. 예술인복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2. 정책연구센터: 성평등분과 성평등위원회
3. 문화다양성 성평등사업: 성평등문화확산

지역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필요성 검토

- 문화예술계의 특수성
- 프리랜서 예술인 사각지대

지역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필요성 검토

-컨트론타워 역할 부재
불안전한 운영

- 문화예술계 성평등
추진체계구축의 한계

예술인복지법 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신설 2018.10.16>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계 성평등조례 제정

목표	추진 방향(안)
평등한 기회	문화예술계 남녀 모두 평등한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생산 통계 전체의 성별 데이터 포함 ② 문화예술계 생태계에 맞는 적극적 고용 및 적극적 참여 개선 ③ 문화예술계 공공/민간 성평등고용 및 임금 공시제 도입 ④ 문화예술계 경력단절 남녀 대상 집중지원
평등한 인권	문화예술계 성인지 감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공공 부문 성인지 향상교육 개발 및 컨설팅 운영 ② 문화예술인 성평등교육 실시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②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속
평등한 권력	문화예술계 여성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단체, 위원회의 여성대표성 제고 ② 문화예술계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성평등한 문화정책을 위한 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 성평등 옴부즈맨제도 추진 ② 문체부+지역정부 문화예술 공공기관 성평등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 추진

지자체, 문화재단 문화비전 성평등정책 전면화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성차별 없는 문화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성평등한 문화실현의 비전을 만들자”

대표과제

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 추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과 민간 단위의 거버넌스 지역성평등 추진주체구성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

송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배우다컴퍼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1.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특징

■ 언론과 형사고소 등을 통한 공개 미투

2016년 트위터(단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특징을 가진 SNS의 일종)의 해시태그 #00계내_성폭력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피해자예술인의 신원을 숨기고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를 고발하여 그가 속한 예술계로 하여금 공동체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었다. 2018년 서지현 검사 이후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대다수의 고발은 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동일한 방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달랐다. 포털사이트에 ‘전북미투’와 같은 검색어만 입력해도 최소 500건의 기사가 나올 만큼 피해예술인이 자신을 언론에 직접 노출시키거나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어쩌면 가장 위험한 최후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1) 피해자의 삶 전반을 둘러싼 폐쇄성 (연계성)

좁은 지역사회에서 ‘누구 아느냐’라는 말과 ‘어느 집 자식’이라는 말은 자신을 소개하는 거창한 문구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타인을 인식하게 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그 보다 더 좁은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작품과 예술인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작품을 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의 삶의 맥락으로 이해하거나 결과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아무리 SNS를 통해 고발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존재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 예술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명예와 명성으로 철저히 숨겨진 가해자의 성폭력 사실

미투로 성폭력 사실이 고발되기 시작되었을 때 가해자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가해자의 명예와 명성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성폭력 사실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렸다. 결국 피해자의 다수는 문화예술계를

떠나거나 지역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다.

3) 피해사실을 알고도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의 위치

다수의 동료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나 가해자와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모두 일정한 급여가 없는 프리랜서이며 작업은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작업에 대한 결정권은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것이었기에 그들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다.

4) 성폭력이 만연한 작업과정

자유로움이라는 기질은 언제나 예술가의 특징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타인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거나 잘못에 대한 회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자유로움이라는 문화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작업 과정이 자유롭다는 것은 실은 '이미 권력을 가진' 선배예술가의 특권이다. 작업과정 내내 성적농담, 성적대상화, 불필요한 사적연락 등 너무도 만연한 성폭력이 일상화되면서 성폭력이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5) 문화예술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소통기구와 예방 교육

2006년 연극을 시작한 이래 2018년까지 12년간 30여개의 작품을 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성폭력 예방교육도 들어본 적 없었던 본인의 경험을 비춰보면 공적지원금으로 창작을 하는 프리랜서들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지원금으로 제작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동안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지원은 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정의 무책임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결국 외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체내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음을 발견한다. 피해예술인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성폭력을 고발해야만 달라질 수 있는 공동체는 정말 이대로 유지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 가해행위자 1대 다수의 피해자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해자 1인과 피해자 다수라는 지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가 몇 년에 걸쳐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종류의 성폭력을 가하는 동안 공동체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이

피해자로 하여금 침묵을 종용하였으며, 무엇이 가해자로 하여금 성폭력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 1)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가해자의 유형은 대표, 연출, 감독, 교수, 심사위원등 등 문화예술계내 최고 권력자로서 사업의 집행, 캐스팅 등 모든 결정권을 가진 위치였다.
- 2) 피해예술인은 대부분 막내, 신입, 계약직, 학생 등 예술행위와 다음 프로젝트에 있어 결정권이 전혀 없는 선택받는 위치였다.

즉,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자신의 권력을 성적으로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

■ 한참 지난 성폭력 고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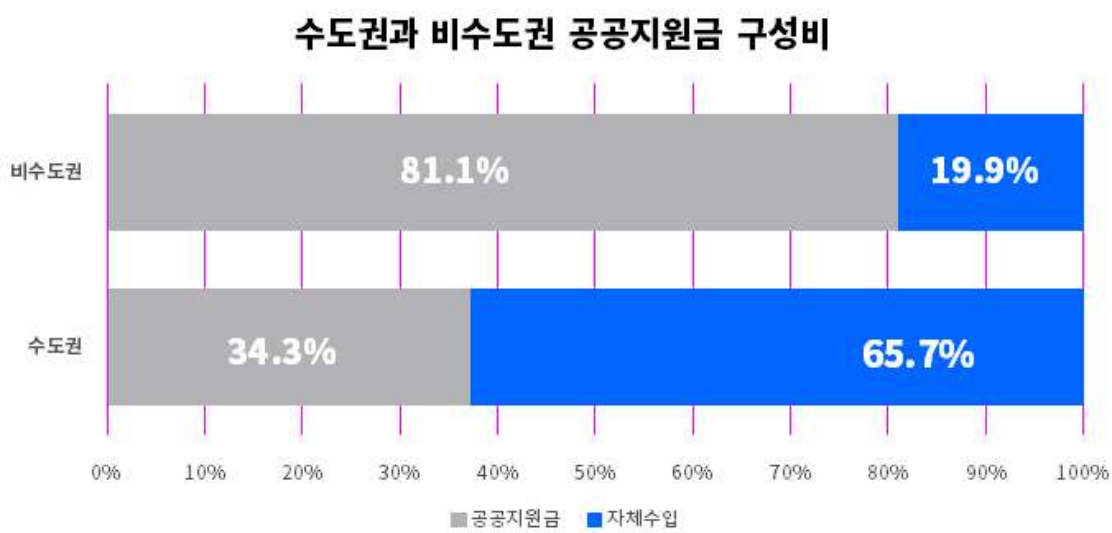
성폭력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길게는 10년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덮어두고 묵묵히 견디던 피해예술인들의 고통에 대해 짐작을 할 수 있을까? 전북지역 피해예술인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왜 바로 신고할 수 없었을까? 혹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앞서 기술했듯 피해예술인 전원은 모두 프리랜서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술작품에 캐스팅되기 위해서 '인맥'과 '품평'이 유일한 기준인 문화예술계에서 경력이 없는 예술인이 자신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은 생계를(예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게다가 예술인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고, 법과 제도에서도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경력과 인맥을 가진 가해자들은 달랐다. 다음 사업에서도 그 다음사업에서도 결정권은 오롯이 본인의 것이었다. 어쩌면 가해행위자들은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의 생태계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특수성

■ 높은 보조금 의존도

- 2019년 지역의 문화예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술작품 판매 및 티켓수익이 고작 8%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

로 환산된다. 이는 수도권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보조금 의존도는 불균형적이다. 게다가 지역은 사기업의 직접 후원이나 예술단체 양성등의 케이스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그만큼 민간영역에서 예술을 소비하거나 향유하려는 문화가 지역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높은 예술 현장 진입장벽

- 그렇다면 그 많은 공적 자원은 누구에게 지원되고 있을까?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몇 개 살펴보겠다.

필수 3. 지원분야별 문화예술활동 과거 실적자료

○ 과거 활동 실적 자료

※ 활동증명 : 문화예술창작지원(육성형) 분야 1회 이상 / 문화예술창작지원(심화형), 문화예술기반구축 분야 5회 이상

기 간 (발간일, 행사일)	작품명 (발간, 전시, 공연 및 기타 행사명)	주관/주최 발행인/출판사	작품 내용

자 기 소 개 서

○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활동분야	공연(<input type="checkbox"/> 연극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각(<input type="checkbox"/> 미술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다원 <input type="checkbox"/> 비평				
세부장르					
○ 학력 및 주요경력					
○ 주요 활동실적(공연보, 연혁, 상훈 등)					

2020년도 전라북도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전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전라북도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3.

전라북도지사

I. 시행계획 총괄

1. 지원사업 예산액 : 1,363백만원

2. 지원신청자격

- 회원 100명 이상의 전라북도소재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6 최근 3년간 공연활동 실적

(단위 : 회, 명, 원)

공연기간	공연장소	공연명(작품명)	공연횟수	관람객수	공연수입	비고

- [소정양식] 지원신청서 1부
- [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 [소정양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자유형식] 공연 제작기획서 (PPT파일)
- [자유형식] 단체소개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 단체활동실적 대표자료 (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 문학작품 각색 저작권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5개 사진은 전라북도 공연예술계의 대표적 사업의 지원서 및 지원공고문에서 발췌했으며, 모두 동일하게 활동실적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다.

활동증빙이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훌륭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다.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활동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전북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업에서 활동증빙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진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신진예술가지원사업에서조차 말이다.

경험이 없거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연고가 없는 예술인은 공적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둘러서 생각해보면 현재 지원사업의 설계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혹은 예술인이 또다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극소수의 기득권을 양성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어려워하며, “대표는 정치할 줄 알아야한다”는 통념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다.

■ 예술대학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청년예술인

- 지역 내 5개의 예술대학의 졸업생들은 왜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가? 공식적

인 자료는 아니지만 본인이 출강하고 있는 대학교의 졸업생 답변과 근황을 살펴보면 계속 전공을 살려 예술작업을 하는 졸업생중 20%도 지역에 남아있길 희망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2020연극의해’를 맞아 전국청년연극인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전국 공론장을 열었고 이 의제는 지역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졌다. 우리지역 청년연극인 10명도 공론장에 참여했고 지역이 청년예술인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것에 대한 어려움과 선배예술인이 자신들을 ‘배워야하는 존재’ ‘부족한 존재’로만 인식하여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 지적사항이다. 또한 무엇보다 바라는 지점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실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과 문화예술계가 평등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구축이라고 답했다.

■ 학연, 지연으로 얽힌 토호 세력과 정치권의 담합

또한 00고 출신으로 뭉친 이들이 지역의 정치권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예술단체를 선거에 동원하거나 당선된 이후 지자체 출현기관 보직 임명 등에 대한 특혜를 주는 등 공정하게 않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계 내 공공연한 사실이다. 본인이 속한 과거의 단체만 해도 단원들이 선거사무실에 동원되고 출판기념회에서 공연을 올리는 경험은 여전히 선명하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소수의 기득권이 가진 영향력은 이렇듯 촘촘한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거대해진다. 전북의 가해행위자의 영향력이 단순히 선배와 대표로만 인식 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 재단 이사진의 불균형한 성비문제

■ 문화예술계 내 반성폭력 연대체 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금이나 예술활동, 친목단체를 제외한 예술인복지를 주장하는 연대체 개념의 시민조직이 전북지역에서 구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모든 특징에서 그러했듯 모두가 같은 공적 자원으로만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예술인 성폭력사건의 경우 이런 단체가 조직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이 직면한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우며, 잘못된 관습에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지역민들마저도 순수예술을 소비하지 않는 분위기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해야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체를 만든다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이곳에서 문화예술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호명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미션에 직면했다.

1.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어디쯤 와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정책과 비교하여)

■ 성폭력, 성차별 실태조사

2018년 미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범 예술인 성폭력, 성차별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여성응답자의 50% 이상이 성폭력과 성차별을 직접 경험했다는 현 실태를 확인했다. 이는 실로 높은 수치로 문화예술계 내 성차별,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수면위로 끌어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 예방교육 의무화, 강사양성, 교육콘텐츠개발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 상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일반화 할 수 없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전문 예방강사’를 직접 양성하고 ‘표준강의안’을 개발하는 등 직접적으로 분명한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표준계약서 성폭력 방지조항

성폭력 방지조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의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 지원사업 참여시 서약서

사업에 지원하는 모든 예술인으로 하여금 서약서를 통해 예방교육 의무화를 약속하고 성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에 서약하는 서약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문화예술계 전담 성폭력 지원센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의료지원을 받는 등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 국고지원 참여 중단, 심사위원 배제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제 신설

1.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

■ 실태조사

-폐쇄적이고 연계성이 강한 지역의 특성상 성폭력, 성차별 사실을 외부로 고발하기는 더욱 어렵다. 지역 예술대학 재학생 등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특징을 가시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체 및 조직의 결정권자의 성비를 확인하여 성주류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예술인 예방교육 및 중간지원조직 성인지 감수성교육 의무화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지원사업 선정자로 하여금 의무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도 성인지 감수성교육을 의무화하여 인식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 표준계약서

지역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지 않았고, 작성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성폭력 방지조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 서약서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모든 지원자가 서약서를 쓰도록 의무화해야하며,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는 징계에 대한 근거가 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이는 책임을 예술인에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바꿔나가야 할 주체임을 확인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재단, 행정 등이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약속이기도 하다.

선정된 이후 서약서에서 그치지 않고 작업과정에 대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재첨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전담지원센터 연계

여성단체, 지역기자, 전문변호사, 현장예술인, 내부인력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젠더관점으로 기존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재단을 통한 생태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지원 중단 및 심사위원배제 및 지원배제

성폭력 사실이 고발되면 모든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차후 지원사업에서도 배재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10년간 지원배제를 통해 공적지원금을 통한 창작활동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 성평등창작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새로운 문화와 그에 따른 학습이 필요할 때 예술인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행정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사업의 지침 등으로 성폭력, 성차별 근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빠른 변화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전환하여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민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인식전환 운동과 캠페인성 움직임으로는 문화예술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예술가로 하여금 성평등창작물 활동을 통해 예술인 당사자를 변화시키고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번외) 왜 성평등의제에 문화예술계를 구분지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술작업이 여타의 노동과 다른 지점은 단순히 종사자의 생계를 위한 행위와 구별되는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업은 어떤 결과물이든 관객을 만나고, 독자를 만나고, 리스너를 만난다. 우리가 창작해낸 모든 것을 대중은 향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 대중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임을 자각한다. 파급력, 영향력, 전파력과 같은 단어가 문화예술계의 수식어로 붙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작자의 젠더 감수성이 대중과 어떤식으로 맞닿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내부를 돌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오롯이 결과물로만 대중을 만나는 방식은 오히려 문화예술을 수단화, 도구화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너무 오랜 시간 ‘결과물’만 남기

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수도 없는 착취와, 성폭력, 성차별은 만연했고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마치 예술의 미덕인양 포장되기 일쑤였다.

우리는 이제 문화예술계를 다시 써야한다. 작품을 수치화하는 방식의 선정 과정을 뒤집고 예술가를 양적척도로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창작물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쳐야 하고 우리의 노동력은 가치 있다고 믿어야 하며 이것을 외치는 우리 모두는 동료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중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작환경 속 예술인은 고통에 처해있다. 왜 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성평등을 외칠 뿐이다. 성평등은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 했던 예술인 복지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정말로 출발점에 서있는 것이다.

[토론]

1. 전북권 문화재단 성평등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

홍교훈(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2. 그래.. 역시 난 비주류였어!

정하영(미술가)

3. 전라북도 성 평등 정책을 위한 전라북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4. 의회 역할 토론문

조동용(전라북도의회 의원)

5. 인권분야 역할

황지영(전주시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6. 문화예술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도인정(전라북도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전북권 문화재단 성평등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

홍교훈(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1. 배경 및 필요성

1) 성폭력예방치료센터와 함께하는 전주시 인권위원회 2차 포럼

■ 전북 문화예술계 미투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시: 2019.3.14.(목)

장소: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주최: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시 인권센터

주요내용: 전북 문화예술계 미투 1년 그리고 2차 가해, 전북 문화예술계의 환경변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2)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조사 분석연구

■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환경

- 1)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세계 144국 중 114로 저조한 상황
- 2)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 대비 실질적인 지위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음
- 3) 문화예술계는 성별 임금 격차가 확연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 가능성이 감소하고 경력유지가 어려운 유리천장이 존재함.
- 4)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전공생은 여성이, 종사자는 남성이 많음.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 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2019~2020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 사업 전북지역포럼 운영

■ 2019 '미투 이후,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다'

-일시: 2019.11.8.(금) 16:00-19:30

-장소: 팔복예술공장(전주)

-주관: 문화디자인자리,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내용: 발제 중심으로 논의 진행됨.

•발제1: 지역 예술가의 현실과 실천 이슈_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송원)

•발제2: 성평등에대한 지역의 자각_부산문화재단(고윤정)

•자유 토의

-참여자: 피해자, 피해자 조력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신문기자, 연구자, 전주시 인권센터 옹호관

■ 2020 전북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워크숍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재단 사업보기 -창

작지원사업 중심으로-

개요

- 일시: 2020.9.21.(월) 13:30~18:00(5시간 30분)
- 장소: 누에 창작소(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
- 참여자: 전북권 문화재단, 성평등 이해가 있는 문화예술인 16명
- 주관: 문화디자인자리
- 전북지역성평등포럼협력주체: 전북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지역 문화예술인)

목적

- 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심의과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안을 도출한다.
- 2021년 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개선안을 제시한다.

2. 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재단 사업보기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 사업> 전북지역 포럼으로 전북 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등과 9월 21일에 워크숍을 진행했음.

-심의제도 내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지원사업 일부에서 2018~2020년의 3년 심의위원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해 보았음. 결과는 특정 성(남성)이 71%, 50~60대가 71%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요인은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몇 년 이상이라는 기계적 선정기준 제한성에 의한 것으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고 분류화해서 심사위원을 구성,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심사(의)위원 조사범위

- 시간범위: 2018~2020
- 공간범위 및 지원사업명
 - 익산문화관광재단: 다이나믹 아티스트 지원 사업
 - 전주문화재단: 시각예술진흥사업, 공연예술진흥사업, 국제교류진흥사업, 신진예술가
 - 완주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기초예술지원사업

■ 심사(의)위원 분석결과

- 성별: 남성 71%, 여성 29%
- 연령: 70대 8%, 60대 31%, 50대 40%, 40대 19%, 30대 2%
- 활동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 활동지역: 도내 65%, 도외 35%

3. 전북권 5개 문화재단 성평등 정책 방향(안)

※ 2020년 11월 1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북권 문화재단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1)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 지역에서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생계 활동 대부분이 공적 자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 지역에서 문화예술인의 평등과 안전을 위한 연대체 민간조직이 부재하다는 것이 현재 상황
- 문화예술인 대부분이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

2) 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성평등 가치 지향 반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편내용과 같이 '예술 생태계 안에서 안전망 강화' 내용 지원사업 공모요강에 반영
- 안전하고 성평등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서의 서약서, 약속서, 의무사항 등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3) 성평등한 심사(의) 과정 운영

심사(위) 위원 구성 시 성비 · 연령 · 성평등 · 문화다양성 등 여러 가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고 성평등과 문화다양성이 반영된 심사평가항목설정, 심사(의) 과정에서 지원자와 심사위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인권 중심의 심사과정 지침 제시 및 운영

4) 재단임직원 포함 지원사업선정자 대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실시

- 개인창작/단체/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 내용이 기획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재단의 경우 임직원 대상으로 사업 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5) 특히 단체 지원 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행동 강령 지침 운영 제시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문화예술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행동 강령 지침이 요청되어야 할 것임.

6) 문화재단의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조항,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처리 및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범위를 문화재단 사업 참여자를 포함하는 방안 고려 필요. 프리랜서, 단기 계약 등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창작 작업을 많이 하는 문화예술인의 안전망 역할을 문화재단이 할 필요가 있음.

7) 문화재단 운영 및 전체 사업으로까지의 성평등 정책 확장 실현

8)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등 전북권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 체계 마련 및 문화재단 간 연대사업 추진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인식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내용(과업기간 2020.12.4까지)

○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개념 정립, 정책 방향 제시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차원의 성평등 정책, 사업 개선 및 추진 과제 제시

그래.. 역시 난 비주류였어!

정하영(미술가)

얼마 전 모 공모에 내기 위해 나의 경력을 정리하던 중에 2010~2011년에 내가 뭘 했었지? 왜 그 두해만 나의 공공 미술적 경력이 없나 고심하던 중,, 아! 그때가 둘째 임신과 출산의 시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결국 다양한 이유에서였겠지만 공모에 떨어지며 다시 든 생각이 '그래.. 역시 난 비주류야! 이제껏 잘 살아왔잖아?' 난 지금껏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는 말 못해도 나에게 누구보다도 그랬었던 리즈 시절이 있었고, 중년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점까지 내가 작업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비주류의 삶을 선택했고, 그 삶 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을 지라도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전시나 공공예술적 활동을 해 온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후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5년 10년 만에 세 번째 개인전을 마치고,
다시 2018년 개인전을 준비하며..

‘그래, 나의 이야기이며 너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



<2018 개인전 /숨꺽러리>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 불러주고, 그녀들에게 누구에게든
동등하게 주어져야만 하는 자기만의 방을 그 안에서의
오롯한 나만의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였다.

201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머무는 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알게 된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 약자로서의 여성의 삶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나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여성인 할머니에게 환영받지 못한 손녀딸이었고, 그래서인지 어려서 더 수줍음 많은 여자아이였고, 하지만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기며 일탈을 꿈꾸기도 한 철 없었던 시절을 겪으며 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데 후회 없게 쉽 없이 치열하게 작업했었다. 처음 졸업 후 큰 협회에서 활동했었지만, 조금씩 의식의 변화와 깨달음에 따라 민미협 활동을 시작하며 나의 선택은 언제나 주류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의 굴레 속에서 겪어야 했던 성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리, 출산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경력단절이라는 꼬리표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를 어

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는 독한 엄마라는 꼬리표 또한 워킹 맘이라면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는 특히나 프리랜서나 전업예술가라 명명하지만 그 또한 생활전선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다행히 기관에 들어가 있는 예술가들도 있었지만, 예술이라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엔 일과 작업 그리고 육아까지 겹친다면 그들의 예술혼은 넓이 나가지 않겠는가..

글의 타이틀에서부터 비주류라 칭한 것은 어찌 보면 그런 나의 선택으로 나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나의 선택으로 들어간 적은 식구 같은 단체였기에, 이익단체이기보단 제도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술 본래의 기능 회복을 지향하는 단체였기에 그래도 미투가 될 만한 상황 없이 잘 버텨왔으리라 믿는다. 이 또한 특히 미술이라는 분야가 다른 공연예술분야보다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작업이기에 가능했고, 대학시절부터 생각해보면 그다지 예쁘거나 튀지 않는 외모나 성격이었기에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때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외모나 학연, 지연 만으로만 판단되는 미술계는 아니었다고, 젊은 시절 한때 작업으로 인정받으며 부푼 꿈을 안고 위대한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지 않았던 자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줄을 서고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꿈을 계속 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인정하는 바이다.

왜 그럼 중년의 여성들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냐? 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사회적 통념과 앞서 말했던 나의 경험처럼 출산과 육아라는 경력단절의 짧거나 긴 시간들이 그녀들을 거기까지 쉽게 가게 내버려두지 않지 않았을까? 반문해 본다. 그녀가 그랬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선배언니들이 없었다고.. 다 그들만의 리그였으니 외롭기도 했겠다. 나도 그 점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 나 혼자 헤쳐 나가는 데도 바쁘고 힘들었다고, 나도 지쳐있었다고.. 그래서 뒤 늦었지만 공감하고 지지하는 여성작가들이 2018년과 2019년 미투&워드 유 전시를 통해 작게나마 동참했고,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여성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 연대는 소통과 공유의 개방적 연대로서 곧 성평등한 세상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다. 올 한해만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심사위원 성비 균형을 위해 심사위원이라는 직책을 두 번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그리 쉽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 의견도 사회에 반영되고 있고, 그런 하나의 변화들이 모여 때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에는 일부러 성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 온 그녀들에게 그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되고 그녀들에게 박수와 갈채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대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엔 쉽게 당연하게 바뀔 우리의 미래에 꾸준히 교육을 통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가정에서부터 노력할 것이고 더 이상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언젠가 꿈꾸는 세상은 당연히 당연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느 리더라도 한걸음 한걸음씩 외로울 지라도 내 딪을 것이다. 아니 이제는 결코 외롭 지 않다.



<현 익산 중앙로 문화예술의 거리 입구 / 우리들의 방展: 여성의 아픔에 자유와 평화의 숨결을>

전라북도 성 평등 정책을 위한 전라북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1. 들어가며

우리사회의 성폭력, 성차별 등 성 평등을 저해하는 인권침해가 수없이 발생하는 것에 무척이나 안타깝고 답답하며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6년 문화예술계에서 제기한 미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이며 저항운동입니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에 대해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한 여성인권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벌어지는 성폭력, 성차별 등 여성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위계적인 조직문화의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사후적인 대책마련을 넘어 바람직한 성 평등 정책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2. 성 평등 정책을 위한 조례 개정과 행정조직 체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2005년 12월30일 성 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 평등 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라북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은 매우 형식적입니다.

전라북도 성 평등 기본조례 제17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해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형식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국장이 양성평등, 나아가 성 평등 정책을 겸임하는 형태의 행정조직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직형식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 여성정책담당관, 그 밑에 젠더정책팀이 있고, 별도의 젠더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젠더자문관은 서울시정의 성 주류화 추진하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종합관리, 4급이상 간부 성인지 감수성 강화교육, 젠더 업무담당자 교육 및 운영 총괄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2017년 9월21일)을 통해 행정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성 평등 조례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 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성 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의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으며, 성 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도 성 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성 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체계가 추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차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 평등 교육과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성 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전라북도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전라북도 의회에서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위계질서에 의한 성차별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습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성차별을 해결해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5개의 문화재단에 대한 성인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등 5개의 기관이 성 평등을 위한 여성인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좋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예술계에 잔존하는 위계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간 업무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상담·의료, 법률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문화예술 종사자의 여성인권이 향상 될 것입니다.

토 론 문

조동용(전라북도의회 의원)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입니다.

송진희 대표님과 송원 선생님의 발제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연구자나 행정가와 다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읽혀서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간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것 이상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참석자분들의 의견이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과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규범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그리고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예술인의 자유분방한 기질의 일부쯤으로 치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규범과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예술활동 또는 예술인의 당연한 덕목으로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비롯된 관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작활동의 원천이자 동력으로서 규범과 질서를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태도와 기질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미투운동이 지니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호소와 사회적 고발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그간의 그릇된 관행이 예술(인)의 특수성으로 용인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이지만 간과되고 은폐되어 왔던 상자 속의 진실을 밖으로 드러낸 것만으로도 미투운동은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폐쇄성입니다. 송원 선생님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피해자의 삶 전반을 둘러싼 폐쇄성'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키우는 악성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익명성 보장이 여의치 않은 지역사회에서, 그것도 분야를 좁혀서 문화예술계로 한정하면 익명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제거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폐쇄적 환경은 가해자의 은밀한 폭력행위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피해 당사자를 더욱 수렁으로 내몰게 됩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은 우리 사회 전반의 젠더 감수성을 키우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법적 제도적 장치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근본적인 대책보다 당장의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기처방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론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성평등 관점으로 포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이 매우 위중하고 직접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인식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성평등 관점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지원, 심리상담, 법률 서비스 지원, 피해자 구제 및 2차가해 방지 등 일련의 지원사항을 패키지화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심리상담 전문가, 그리고 성폭력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송진희 대표님이 발제문에서 밝힌 것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조례에는 성폭력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신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의 구체성을 제고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과 성폭력 이슈를 연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을 경우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보조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조사업 지침에 명문화한다면 그 자체로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그것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감수성과 함께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디더라도 도내 지역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 인권분야 역할

황지영 인권옹호관(전주시 인권담당관)

미투의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들을 듣게 되었을 때 성평등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성평등 의제가 문화예술계의 더 많은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고 동시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성평등의제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문화예술계의 더 다양하고 많은 의제들이 있을 텐데 ‘아직도 성평등?’ ‘아직도 미투?’ ‘그만하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왜 문화예술계의 정책과 제도에서 성평등 의제가 당연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불평등’하기 때문이고, 불평등이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존엄한 삶’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알려진, 유명한 그래서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차별과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더 많은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의 문화예술계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는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렸고, 비정부기구(NGO) 회의와 정부간(GO) 회의를 거쳐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담은 것인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다.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전제하에 빈곤,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의사결정, 인권, 환경 등 12개 주요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입법, 정책, 예산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이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예방, 여성대표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도입 등 성주류화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항목 중 5번째는 양성평등과 여권신장실현 (Gender Equality)이며 2018년 1월 「목표 5. 양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이행을 주제로 개최된 회의에서 아mina J. 모하메드 사무차장은 개회사에서 “양성불평등 해소는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자,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질서 건설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히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엔 회의국들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출처:UNODC. 1월 10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목표 5. 성평등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를 67.3%에서 83%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의 근간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는 ‘양성평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과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전제하고 볼 때 문화정책에서의 성평등은 정부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을 가져오도록 하는 성인지적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제문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과제’에서 기록된 것처럼 2016년 트위터의 해시태그로 시작된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서부터 2018년 서지현 검사 이후 이어진 다수의 미투 운동은 현실에서의 젠더차별의 심각성과 불평등한 문화예술계의 정책, 제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송원의 발제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지역사회라는 폐쇄성, 명성으로 숨겨지는 가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알고 있지만 함께 작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한 작업 과정 그러나 이 문제를 말할 곳이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인식 개선이 안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송진희의 발제문에 기록된 것처럼 지역의 성평등한 문화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책이 문화재단이나 예술인 단체 등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서 성불평등한 제도, 정책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예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분의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모두 동의하면서 필요하지만 진척이 잘 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해보았으면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역에서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진한 이유.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 예방교육 의무화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양성과정이 함께 고민되고 있는가?
3. 표준계약서, 지원사업 참여서 서약서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 전담 성희롱. 성폭력 지원센터(가칭)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4.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지원사업이나 심사위원에서의 배제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5.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재단과 민간단위의 성평등추진체계 거버넌스 구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영향력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성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평등 의제 실현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불평등한 시스템으로 인해 어떤 문화예술인들도 소외되는 지역사회가 되지 않도록 성평등 정책 구현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대다수 회원국에서의 예술가들의 상황은 특히 인권,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그들의 고용조건과 관련해서 불안한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여 재능을 개발하고 꽃피우는데 필요한 여건과 지역사회들과 국가들의 문화정책 및 문화발전 활동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생활의 질의 향상에 예술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적절한 여건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공당국의 행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모든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가진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1980.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 27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화예술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도인정(전라북도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전북 성평등 환경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18년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참여 중 의사결정 분야에서 기초의원(12,13,13,14위), 5급이상 공무원(11,12,12,11위), 지자체위원회(15,15,15,14위) 성비는 4년 연속 전체 16개 시도 중 10위권 밖이다. 16개 시도 중 대전·세종과 전북만 독립적인 여성정책관련 연구기관이 없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행하는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기 힘든 전북지역 정치권의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 정책연구와 실행이 녹록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흐름

성별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법령, 계획, 사업이 대상이 된다. 지자체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선정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선택적으로 컨설팅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계 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북은 각 컨설턴트가 지자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청년·일자리·도시재생·4차산업 분야 대상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청년·일자리·도시재생·4차산업에 특화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기엔 한계가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계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핵심지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방향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위촉한 시민)가 서면 혹은 대면으로 만나 컨설팅이 진행된다. 사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을 시 실질적 컨설팅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긴다.

1. 지원사업 관련 point

- 지원 대상 : 개인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배제하지 않는지, 경력단절 여성문화예술인을 배제하지 않는지 세부계획 및 조례 점검
- 심사위원 : 성범죄자 경력조회, 성별통계가 있는지 점검 및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여성문화예술인 진입을 어렵게 하는 심사위원 자격 제한 점검. 향후 심사과정에 젠더관련 전문가 진입 제도화
- 제출 서류 : 성평등 서약서, 성평등 교육 이수증, '성폭력 대응 매뉴얼' 및 '성평등 공간 약속문' 창작공간 게시 사진(해당 창작영역)

2. 창작환경 개선 관련 point

- 창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창작자에 대한 심사위원 및 지원사업 제한 장치
- 지원단체 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및 성인지교육 의무화(이러닝활용)
- 성평등 창작 가이드 생산 및 배포
- 참여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창작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성차별적 창작물 지원 배제를 위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성평등)만족도 조사 실시
- 성평등 창작물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역할

2021년 전북 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해 문화예술인, 관련 공무원, 관련 연구원,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팀 구성을 통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방향 설정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의제 발굴이 뒤따라야 한다.

Memo



Memo



